

3 코로나19를 통해 다시 생각하는 기후위기와 거대한 전환, K-그린 딜



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일상에 균열을 내고 경제를 현저히 위축시키면서 기후위기와 공통 원인이 된 성장일변도의 개발 지향 경제성장에서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는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우리 경제와 생활양식의 탈바꿈을 요청한다. 코로나 이후는 세계 모범이자 표준이 된 ‘K-방역’ 성공에서 배운 단절과 파격, 혁신과 포용을 기반으로 K-녹색 경기 부양의 길을 택해야 한다. 에너지전환과 순환경제가 K-녹색 경기 부양의 핵심이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단절과 파격, K-방역의 부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아니 세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언급했듯, 우리가 이제까지 써온 서력기원의 BC(Before Christ)와 AD(Anno Domini)를 넘어 역사는 새로운 BC(Before Corona)와 AD(After Disease)로 나뉘지도 모른다. 새로운 가치의 시대, 뉴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고도 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사망자와 확진자 증가로 의료 체계 붕괴를 겪기도 했으며 격리와 봉쇄로 경제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마비되면서 경제가 위축되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세계의 연결성과 그 위험성의 이면을 확인하며, 이제껏 당연하게 누려온 일상 질서가 교란되거나 억제되는 데 따른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과 수입이 줄어든 이들이 늘고 새로운 근무 형태와 교육 방법이 도입되는 등 단절과 파격이 시도되며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60명 이상의 사망자, 만천명 이상의 확진자, 수만명의 자가격리자 등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 철저한 추적과 격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빈부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 확진자 무상치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의 시민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었다. 지역 봉쇄나 국경 폐쇄 없이, 질병관리본부라는 조직체계 아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초로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과 개발, 드라이브 스루나 워크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 빠르게 도입되고 2천 9백만명이 참가한 총선을 단 한 명의 감염 없이 치러냄으로써 개방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모범이 되었다. 사재기는커녕 시민들은 기부와 봉사에 적극 나서고 국가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광범위하게 대화하고 능력이 닿는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연대와 나눔의 힘 또한 보여줬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가치가 더없이 빛났다.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유례없는 '사건'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 다수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제껏 소위 선진국이라 불린 국가들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역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춰본 건 아닌지, 그간의 관점과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
코로나19란
비상상황으로
대담한 시도가
가능해졌다.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상호 맞물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다. 성장일변도의 개발 방식이 두 위기의 공통 원인이다. 지속적인 개발로 야생동물 서식처인 숲을 파괴하고 소멸시킴으로써 야생동물들이 인간 사회와 가졌던 거리가 점점 좁아지면서 결국은 야생동물을 숙주로 했던 바이러스들이 옮겨와 사람을 숙주로 삼게 된 것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병의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개발은 화석연료 연소로 추동되었기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었지만 오히려 숲이 줄면서 숲이 흡수 저장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더 많이 배출되어 기후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숲 파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은 육식 증가이다. 방목과 사료 경작을 위해 숲을 파괴하며 성장한 축산업은 심각한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전 세계 곡물의 절반을 쓰면서 온실가스의 18%를 배출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기후변화로 산불, 가뭄,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빈번해지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 거주지나 목축지로 이동해 사람들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온상승으로 감염병 전파 매개체인 모기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Dengue, 말라리아, 콜레라 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내부에 냉동돼 있던 고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깨어남으로써 고대 질병들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로 온도, 강수량, 습도 등이 달라지면 병원균의 성장 발달이나 매개체의 성장 발달과 생존 기간, 분포, 개체 수, 매개체 서식지 등이 변하여 전염병의 전파 시기나 속도와 강도, 질병 분포도 바뀌면서 예측이 어려워진다(신호성·김동진, 2008).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이 기후위기를 강화하기도 한다. 바로 폐기물 때문이다.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과 위생을 이유로 마스크나 비닐장갑은 물론이고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이 더 많이 사용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라인 쇼핑이 늘고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더욱 늘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정이 잠정 해제되면서 일회용품 이용이 가속화되었다. 검진과 환자 치료과정에서 방호복이나 기타 보호장비 등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고온소각 처리해야 하는 의료폐기물도 급증했다. 늘어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투입되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로 귀결된다.

해방적 파국과 좋은 부수효과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고 울리히 벡(Ulrich Beck, 2015)에 따르면, 재난(Disasters)은 해방적 파국(Emancipatory Catastrophe)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재난을 통해 파국을 목도하거나 경험하게 되면 정부나 시민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과 조건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해방적 상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각성에 이른다. 그 결과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재탄생하는 탈바꿈(Metamorphosis)을 통해 ‘변혁’이 일어난다. 이것이 위기의 다른 측면, 기회이다.

코로나19란 비상상황으로 대담한 시도가 가능해졌다.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며 그간 다른 사회보다 낮았던 우리 사회의 정부 신뢰가 한층 높

아졌다. 우리 사회의 감염병 방역체계가 한층 단단해졌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혁신’의 효과를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며 능동적인 팔로십(Followship)을 실천하면서 선한 의지로 기부와 봉사, 연대와 협력 등 포용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또 체감하였다.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이제껏 서류로만 제시되었던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여러 가지 장애요인 탓에 미뤄졌던 온라인 교육이, 현실에서 시행되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계속 개선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단절은 환경적으로도 의도도 기대도 않았던 ‘좋은 부수효과’를 낳았다. 사회경제활동이 줄고 이동이 줄면서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었다. 심지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다. 미세먼지가 줄어 하늘이 맑아지고 교통혼잡이 사라졌으며 소음이 줄었다.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야생동물이 숲이나 바다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 글로벌 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에너지 수요는 지난해 대비 6%, 전력수요는 5% 감소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8% 감소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현대 산업문명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안전과 생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인간활동이 강제적으로 멈춰지거나 잦아들면서 지구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걸 체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다. 예전과 같은 방식과 규모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면, 환경 상태도 온실가스 배출도 예전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할 기후재난의 불평등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았다.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일수록 코로나19의 감염과 대응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영향의 차별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빈부에 따라 달랐고 자가격리 방식이나 형태가 달랐다.



“
위기의 근원인
경제활동을
탈바꿈해야 한다.
K-뉴딜을 넘어
‘K-그린 딜’
즉 ‘K-녹색
경기부양’이
출구전략이어야
한다.
”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그나마 우리는 국민의료보험제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증 검사와 격리, 치료에 개인 부담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았다.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 국내외 모두 직종과 근무지, 고용 형태, 자산 규모,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이 달랐다. 처한 상황에 따라 출근 방식이나 근무 형태, 급여나 소득의 오르내림이 달랐고, 사업 규모와 성격, 영업 방식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기후위기의 차별적 영향은 코로나19보다 증폭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의 등장과 확산에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상기후가 보다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한다면 거주 장소나 가옥 단열상태, 노동형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집단은 기후위기에 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경우,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기후위기 이야기에 공통의 책임이 있지만 책임의 크기는 같지 않다. 화석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고 육식을 더 많이 하는 개인과 집단, 국가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기후위기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난한 개인과 집단, 국가에 훨씬 더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 모순적이다.

K-방역을 넘어 K-녹색 경기부양으로!

코로나19는 위협의 가시성과 임박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그나마 가능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 국면이 도래할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원인과 결과 간 시간 지체가 길고 대응 시기를 놓쳐 극적인 전환점(Tipping Point)을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파국으로 치달게 된다. 기후체계 교란에 따른 이상기후 빈발로 재산과 생명의 손실이 발생하고 경제질서가 흔들리거



나 무너짐으로써 우리 삶은 더 넓고 더 깊게 교란되고 심지어 해체될 수 있다. 사회 내 사회 간 불평등이 더욱 높아지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보여준 일상의 교란과 균열, 경제의 위축과 고통은 기후위기가 가져올 징후의 맛보기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4대 기후악당으로 불린다. 2016년 기후행동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라는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 컨소시엄이 각국의 기후행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분류하였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보여준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실천을,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보여줄 수는 없을까? 코로나19를 겪으며 단절과 파격이 가능하고 발상의 전환과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로 연대하고 협력할 때 공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간 우리가 간혀 있었던 시간과 공간, 종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 미래세대와 전 지구와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하고 포용하며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탈바꿈해야 한다. 과거로의 회귀는 다시 기후위기를 잉태하고 심화할 뿐이다.

위기의 근원인 경제활동을 탈바꿈해야 한다. K-뉴딜을 넘어 ‘K-그린 딜,’ 즉 ‘K-녹색 경기부양’이 출구전략이어야 한다. 기후위기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약속한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Net Zero)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해 7.6%씩 줄어야 한다. 이제 코로나19의 원인이자 기후위기의 원인인, 화석연료 기반의 개발지향적, 성장일변도 경제는 과감히 접어야 한다. 사회 전반의 탈바꿈, 새로운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뜻하지 않게 얻게 된 좋은 부수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의 모멘텀을 키워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핵심적인 K-녹색 경기부양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후위기를 벗어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 이상기후로 식량위기가 올 수 있고 육식과 폐기물 양산이 문제를 심화하므로, 식단과 생활양식을 바꾸고 식량안보와 순환경제를 모색해야 한다. 지금의 많은 제도와 법, 정책은 과거 파괴적 성장일변도 개발경제에 여전히 매여 있다.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진 정부 역량, 시민의 정부 신뢰와 참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보여줬던 효과적 조직운영, 혁신적 발상의 전환, 과감한 개혁, 포용의 가치가 우리의 자산이자 잠재력이다.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거대한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K-방역을 넘어 K-녹색 경기 부양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 🌍

참고문헌

신호성·김동진, 「기후변화와 전염병 질병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24-4, 2008.

Beck, Ulrich, "Emancipatory catastrophism: What does it mean to climate change and risk society?" *Current Sociology*, 63(1): 75-88, 2015.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Energy Review 2020: The impacts of the COVID-19 Crisis on global energy demand and CO2 emissions" IEA Publications, 2020.